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2

<http://sri.kostat.go.kr>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김두섭 (한양대학교)

- 한국의 인구규모는 2022년 현재 5,163만 명이며, 이미 자연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대 후반에 4,000만 명 이하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 한국의 출산률은 2000년대 진입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15년 이후 급격한 저하를 지속하고 있다.
- 한국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40년대 초반에 일본과 서구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대수명이 선진국 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아졌다. 고령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조사망률과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암, 심장 질환, 폐렴 등 퇴행성 질환과 아울러 자살에 의한 사망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대도시들의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 단계에 진입하였다. 경기도와 세종은 유입 인구와 순이동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수도권과 중부권은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고, 영남권과 호남권은 유출 인구가 더 많았다.
- 코로나19가 인구 영역에 미친 파급효과는 결혼과 출생의 감소에서 뚜렷하다. 결혼의 감소는 추후 출생의 추가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2021년 후반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22년 3월 최고점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인구 현상은 해당 사회의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적 현상을 반영하거나 상호작용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동시에 인구 현상은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온다. 최근 범세계적 경제불황은 결혼과 출산력뿐만 아니라 사망력, 인구이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인구는 초저출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자연감소 단계에 진입하였다. 한국 사회는 금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및 복지 제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의 광범한 확산은 결혼, 출생, 사망, 이동 등의 인구현상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 글은 한국 인구의 성장과 구조의 최근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출산력 저하, 고령화 추세, 사망률과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인구 변화, 도시화와 지역 인구의 변화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분석은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향통계」, 「장애인



구추계」 및 UN 인구 DB 자료와 아울러 질병 관리청의 「코로나19 사망자 통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인구 성장과 구조의 변화

지난 20세기 초까지 고출산, 고사망을 유지하던 한국 인구는 1980년 중반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지고 제1차 인구변전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출산력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였으며, 2000년대 진입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사망률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였다. 그 결과, 이제 한국 사회는 인구와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를 걱정하고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정책적 대처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 인구는 2022년 현재 5,163만 명으로 세계 29위에 해당하며, 인구성장률은 -0.23%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장기추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 인구가 감소하는 단계로 진입하였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인구의 절대규모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령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데 있다. 출산수준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2070년 생산연령인구(15~64세)와 유소년 인구(0~14세)는 각각 2020년 규모의 46.5%와 44.6%에 불과한 수

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20년의 2.1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2050년대 이후 한국 인구의 연령구조가 60세 이상 인구가 두터워지는 전형적인 역삼각형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구조는 성, 연령, 혼인상태에 따른 인구학적 구성과 교육수준, 직업, 수입, 거주지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구분해 파악된다. 〈표 I-1〉에는 1990년 이후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혼인상태별 인구구성의 변화 양상이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남녀 인구의 구성은 비교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자 인구가 여자 인구보다 약간 많은 상태가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남녀 인구의 비중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각각 49.7%와 50.3%로 집계되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그 차이가 줄어들어 각각 49.8%, 50.2%로 여자 인구의 비중이 약간 높은 상태로 역전되었다.

연령구성은 출산율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표 I-1〉에서 보는 것처럼, 0~14세 유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5.7%에서 2000년 21.0%,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2.3%와 12.0%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한편, 15~64세 인구의 비중은 1990년 69.4%에서 2000년 71.7%로 약간씩 증가하다가 2017년의 73.2%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바뀌었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71.3%와 70.8%로 집계되었다. 이에 비해

〈표 I-1〉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 1990-2021

	(%)				
	1990	2000	2010	2020	2021
성					
남자	50.2	50.2	49.7	49.8	49.8
여자	49.8	49.8	50.3	50.2	50.2
연령					
0-14세	25.7	21.0	16.2	12.3	12.0
15-64세	69.4	71.7	72.5	71.3	70.8
65세 이상	5.0	7.3	11.3	16.4	17.2
거주지					
시(동)	74.4	79.7	82.0	81.5	81.5
읍	8.3	8.1	8.6	9.8	9.9
면	17.3	12.2	9.3	8.8	8.6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3.4	25.7	20.3	14.4	-
중학교	18.5	13.6	11.9	9.3	-
고등학교	34.0	34.6	31.2	31.6	-
대학 이상	14.1	26.1	36.6	44.7	-
혼인상태					
미혼	33.0	30.1	30.6	31.1	-
유배우	59.1	60.6	57.7	55.9	-
사별	7.2	7.4	7.6	7.2	-
이혼	0.8	1.9	4.0	5.8	-

주: 1) 인구는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교육수준별 인구와 혼인상태별 인구는 각각 6세 이상,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함.

2) 1990-2010년은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20-2021년 성, 연령, 거주지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결과임. 2020년 교육수준과 혼인상태는 2020년 등록센서스의 20% 표본조사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과 2021년 전체 인구에 대한 비중은 1990년 비중의 3.3배와 3.4배 수준으로 커졌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급속한 도시화로 1990년에는 도시 인구 비중이 74.4%에 도달하였다. 도시 인구의 비중은 2010년과 2021년에 각각 82.0%와 81.5%로 높아졌으며, 여기에 읍 지역의 인구를 포함하면 그 비중이 각각 90.7%와

91.4%에 이른다. 도시 인구 비중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표 I-1〉에서 보는 것처럼, 읍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은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21년 9.9%에 이르렀다. 한편, 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촌 인구의 비중은 1990년의 17.3%에서 2010년과 2021년에 각각 9.3%와 8.6%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한국 인구의 교육수준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내국인 인구의 비중은 1990년 33.4%이었으나 2000년 25.7%, 2020년 14.4%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중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 9.3%로 집계되었다. 한편, 고등학교 학력자의 비중은 2000년 34.6%를 기록한 이후 현저하게 감소하여 2010년 31.2%에 이르렀으나 2020년에는 31.6%로 약간 상승하였다.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은 1990~2020년 기간에 14.1%에서 44.7%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그리고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30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는 12.5년으로 집계되었다.

내국인 인구(15세 이상)의 혼인상태별 구성을 보면, 유배우자의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미혼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유배우자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결혼 지연과 비혼주의 경향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연령집단에서 미혼자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25~29세와 30~34세 인구의 미혼자 비중이 2020년에 각각 87.4%와 56.4%로 높아졌다. 사별자의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이혼자 비중은 1990년 0.8%에서 2000년 1.9%, 2010년 4.0%, 2020년 5.8%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연령집단별 이혼자의 비중은 55~59세에서 11.6%로 가장 높으며, 50대 이상 인구의 이혼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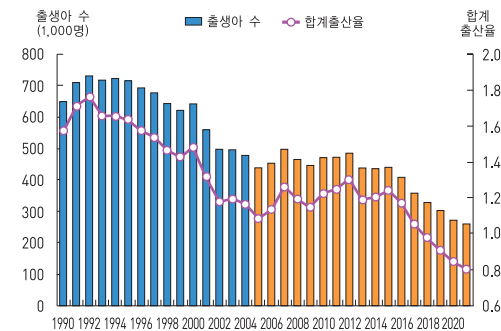
초저출산의 고착화

한국 인구의 출산력 변천은 1960~1985년 기간의 제1단계와 1985년 이후 현재까지의 제2단계로 구분된다. 제1차 출산력 변천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변되는 사회경제적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가치관과 사회규범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국가시책으로 강력하게 시행된 가족계획사업이 출산력 변천을 크게 촉진시켰다.

제2차 출산력 변천의 주요 요인으로는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 가족 형성의 지연과 약화, 그리고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가족계획사업이 1990년대에 들어와 유명 무실해진 이후 초저출산으로의 제2차 변천에서는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급격한 변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대두, 그리고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등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일어난 급격한 출산력 저하의 주된 원인이다.

한국에서 출산력 저하는 1990년대 말의 외환 위기를 계기로 가속화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I-1]을 보면,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1990년대 초에 약간의 상승 반전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각각 43.9만 명과 1.09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출산력 저하의 폭과 속도는 인구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 그림에서 2000년에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반짝 증가한 것은 ‘새천년 베이비붐’에 기인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림 I-1]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1990~2021



주: 1)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그림 I-1]에서 주목할 것은, 출산수준이 2005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약간 반동의 조짐을 보였으나, 2012년 이후 다시 저하 추세를 보인

다는 사실이다. 출생아 수는 2006년 45.2만 명, 2007년 49.7만 명으로 반등한 후 2012년 48.5만 명, 2014년 43.5만 명, 2016년 40.6만 명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2021년에는 26.1만 명의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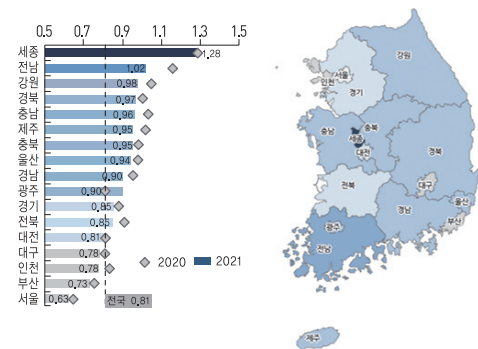
합계출산율은 2007년 1.26, 2010년 1.23, 2015년 1.24, 2017년 1.05, 그리고 2021년에는 역사상 가장 낮은 0.81로 집계되었다. [그림 I-1]에서 2006년과 2007년, 2012년에 출산수준이 오름세를 보인 것은 쌍춘년, 황금돼지띠 및 용띠의 해 등 출산년도 선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출산수준은 거주하는 시·도에 따라서도 편차를 나타낸다. 출생아가 많은 지역은 2021년에 경기도(7.6만 명), 서울(4.6만 명)의 순이었으며,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의 출생아가 13.7만 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2.4%를 차지하였다. [그림 I-2]에서 보는 것처럼, 2021년 합계출산율은 세종(1.28), 전라남도(1.02), 강원도(0.98), 경북(0.97) 순으로 높고, 서울(0.63)과 부산(0.73)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광주, 대전,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2021년 합계출산율이 2020년보다 감소하였으며, 특히 전남, 제주와 충남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한국 인구가 2000년대 진입 이후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 그리고 개인주의화 경향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더 이상 당연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녀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에 각각 27.8세와 24.8세였으며 이후 매년 0.1~0.4세씩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1년 각각 33.4세와 31.1세에 도달하였다. 여자의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첫째 자녀를 낳은 평균 출산연령과 전체 자녀에 대한 평균 출산연령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1년 각각 32.6세와 33.4세에 이르렀다. 그리고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구성비도 35.0%로 높아졌다.

[그림 I-2] 시·도별 합계출산율, 2020-2021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이에 따라 주된 출산연령층이던 20대 여자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30대 여자의 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까지 상승 추세를 보인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연령층이 20대 후반 집단에서 30대 초반 집단으로 바뀌었다. 또한 30대 후반 집단의 출산율 역시 2005년을 기점으로 20대 초반 집단의 출산율보다 높아졌으며, 그 격차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동안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당분간 ‘저출산의 덫’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제기된다. 뚜렷한 경제적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젊은 세대가 결혼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 또 한,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져 출산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앞으로 한국 인구의 출산력이 반등하여 초저출산 상태를 탈피할 것인가의 여부는 경기침체, 실업률, 노동시장의 불안정 등 경제적 여건의 전개 방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고령사회의 도래

한국 인구의 고령화는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의 OECD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어느 국가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 50년 이상 소요된 고령화 관련 변화들이 한국에서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 인구의 고령화는 2040년대 초반에 일본과 서구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한 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인구는 2017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보다 많은 단계로 진입하였다.

〈표 I-2〉에 제시된 고령화 추세를 살펴보면,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960년에 각각 2.9%와 0.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15.7%와 3.6%로 상승하며, 2070년 각각 46.4%와 21.8%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2〉 고령화 추세와 전망, 1960-2070

연도	인구 (100만명)	인구구성률(%)		중위 연령	노년 부양 인구비	고령화 지수
		65+ 인구	80+ 인구			
1960	25.0	2.9	0.2	19.0	5.3	6.9
1980	38.1	3.8	0.5	21.8	6.1	11.2
2000	47.0	7.2	1.0	31.8	10.1	34.3
2020	51.8	15.7	3.6	43.7	21.8	129.3
2030	51.2	25.5	6.1	49.8	38.6	301.6
2040	50.2	34.4	10.8	54.6	60.5	389.5
2050	47.4	40.1	16.5	57.9	78.6	456.2
2060	42.6	43.8	20.1	61.2	90.4	570.6
2070	37.7	46.4	21.8	62.2	100.6	620.6

주: 1) 노년부양인구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2) 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15세 미만 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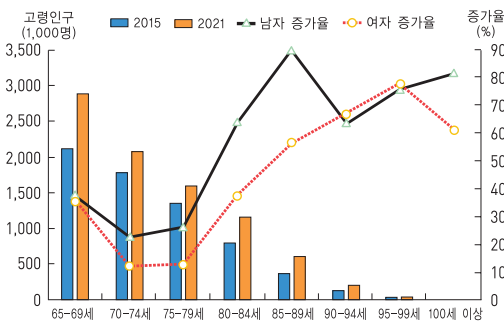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 2021.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한국 인구의 중위연령은 매우 빠른 상승추세를 보인다. 중위연령은 1960년 19.0세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43.7세로 높아지며 2070년에는 무려 62.2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피부양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노년부양인구비는 1960년 5.3 수준이었으나 2020년 21.8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70년에 이르면 100.6 수준에 도달하여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이 된다. 또한 2020년과 2070년의 고령화지수는 1960년에 비해 각각 18.7배와 89.9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3]은 2015~2021년 연령집단별 고령 인구 규모와 증가율을 보여준다. 이 기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55.3만 명에서 857.8만 명으로 30.9% 증가하였다. 그리고 남녀 모두 70세 이후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초고령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3] 고령인구의 연령집단별 규모 및 성별 증가율, 2015~2021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연도.

한국 인구의 연령구조는 거주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중은 2021년 현재 전국적으로 17.2%이며, 시·도별로는 전라남도(24.5%)와 경상북도(22.6%)가 가장 높다. 대체로 먼 지역이 높고, 동 지역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상북도(의성군, 군위군, 영덕군, 영양군, 청도군, 청송군) 및 경상남도 서부지역(합천군,

산청군, 남해군, 의령군)과 전라남도 남서해안(고흥군, 보성군)을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지역들이 고령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들은 공기와 물이 맑아 신선한 채소나 먹거리로 유명하며, 지형의 기복이 심하여 운동량이 많거나 해안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 화성, 세종, 시흥, 구미, 오산, 천안 등의 도시지역에서는 고령화 지표들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저출산 수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 고령인구에 대한 부담비용이 크게 늘어나 연금,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복지제도에 심각한 부담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젊은 인력의 부족 사태가 초래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정부는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적인 시안들을 마련해왔다. 그런데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막대한 재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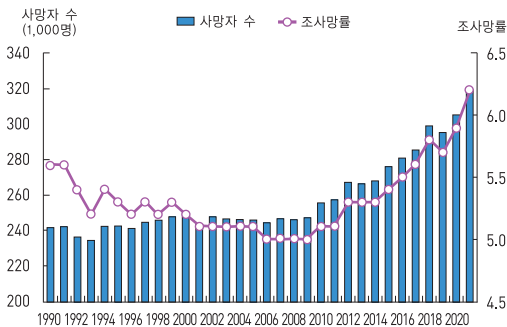
사망률의 변화와 지역 편차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한 사망률은 선진국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조사망률은 2006~2009년 기간 동안 1,000명당 5.0명의 최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상승하는 추세로 반



전되었으며, 2021년 1,000명당 6.2명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자 수 역시 2006년 24.4만 명의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31.8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그림 I-4).

[그림 I-4]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1990-2021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조사망률과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최근 추세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2021년 사망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사망률이 감소하거나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80세 이상의 사망자 수가 지난 15년간 2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국 인구의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I-3>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인구의 조사망률은 세계 인구와 개발도상국,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선진국의 평균값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만 0세 어린이의 영아사망률 역시 선진국 평균값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기대수

명을 비교해 보아도 선진국의 평균값보다 남녀 모두 5.5년씩 더 긴 것으로 확인된다.

<표 I-3> 세계 인구와 한국 인구의 사망관련 지표, 2021

	조사망률 (인구 1,000명당)	영아사망률 (인구 1,000명당)	기대수명(세)	
			남자	여자
세계 인구	8.8	27.9	68.4	73.8
선진국	11.8	4.0	74.9	81.3
개발도상국	8.2	30.3	67.2	72.1
아시아	8.1	22.2	70.1	75.1
한국	6.5	2.4	80.4	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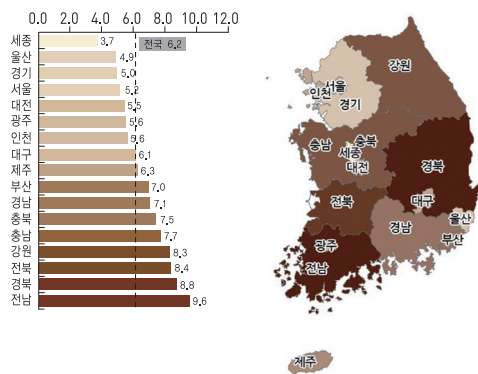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사망률은 성, 연령을 비롯한 인구학적 조건에 따라서 편차를 나타낸다. 사망자 수는 2021년 남자 17.2만 명, 여자 14.6만 명이며, 1,000명당 사망자 수는 각각 6.7명과 5.7명으로 남자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높다. 연령에 따라서는 만 0세 영아의 사망률이 월등하게 높다. 연령별 사망률은 1세 이후 10세 정도까지 낮아지며, 그 이후에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한다. 또한, 최근에는 남녀 인구의 사망률 격차가 40세를 넘으면서 현저하게 벌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극대화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그림 I-5]에서 사망률 수준은 거주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 사망자가 많은 지역은 2021년에 경기도(6.7만 명), 서울(4.9만 명), 부산(2.4만 명)의 순이었으며,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인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41.8%에 해당하는 13.3만 명이었다.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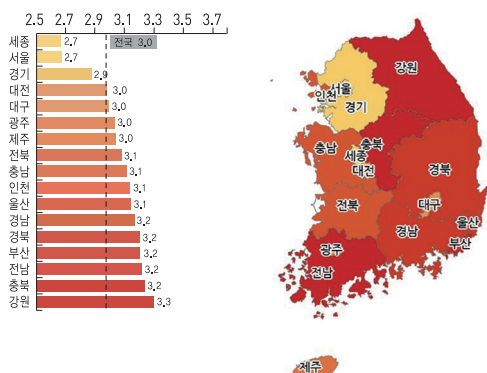
망률(1,000명당)은 전라남도(9.6)와 경상북도(8.8) 및 전라북도(8.4)가 높고, 세종(3.7), 울산(4.9)과 경기도(5.0) 및 서울(5.2)이 낮다. 그러나 [그림 I-6]에서 보는 것처럼, 각 지역의 연령 구조를 2005년 전국 인구 기준으로 표준화한 사망률은 강원도가 가장 높았고, 서울과 세종 다음으로 경기도가 낮았다.

[그림 I-5] 시·도별 조사사망률, 2021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그림 I-6] 시·도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21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사망률의 감소는 사망원인구조의 전환을 수반하고, 그 전환은 보건제도의 개혁이나 발전된 의료시설의 도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동서양의 질병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발전 과정에서 전염병이나 기생충 감염에 의한 사망은 줄어든다. 선진사회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등 퇴행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아진다.

한국에서는 지난 사반세기 동안 소화기 질환과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이 감소한 반면, 암, 심장 질환, 폐렴에 의한 사망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자살률은 이른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급증한 이래 빠른 속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011년 31.7명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5.7명과 26.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은 1997년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규모는 2021년 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22년 3월 최고점에 도달하였으며, 앞으로 폐렴이나 호흡기 관련 질환에 의한 고령집단의 사망이 증가할 개연성을 지닌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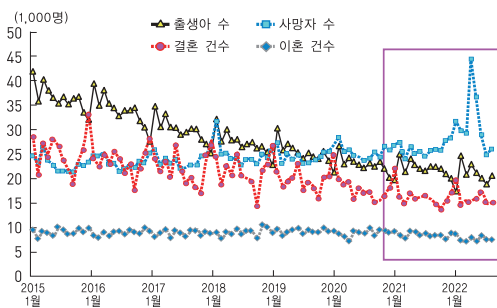
코로나19가 2020년 초부터 광범하게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생활과 생활양식의 모



든 측면에서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결혼, 출생, 사망, 이동 등 인구 영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이 인구 영역의 각 측면에 미친 파급효과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를 자료의 형태로 포착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가능한 실정이다.

[그림 I-7]은 2015년 이후 출생아, 사망자 및 결혼과 이혼 건수의 월별 추이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출생아 수와 결혼 건수는 하락하는 반면, 고령화로 인하여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추세를 감안하지 않으면 코로나19의 파급효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다. 또한 결혼, 사망과 출생은 계절에 따라 규칙적인 변화의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그림 I-7]에서 2020년 1월 이후 관찰되는 모든 변화를 코로나19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림 I-7] 출생아, 사망자 및 결혼과 이혼 건수의 추이, 2015.1~2022.7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월.

코로나19의 파급효과는 결혼의 감소에서 뚜렷하게 관찰된다. 즉 2020년 봄 이후 6월과 9월, 그리고 2021년 6월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달에서 결혼 건수가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혼 감소는 2022년부터 출생아 수의 추가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출생아 수는 2021년 10월과 12월에 2019년 대비 각각 19.0%와 19.5% 감소하였다. 한편 [그림 I-7]을 보면, 이혼 건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드러진 변화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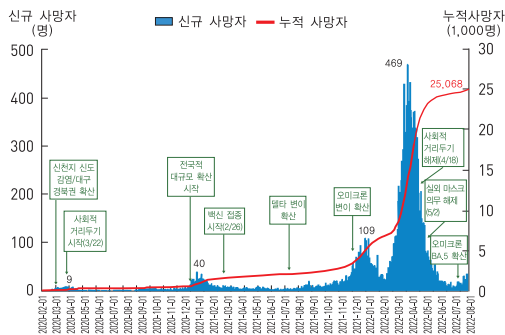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는 2022년 7월 31일 현재 25,068명이다. 이는 2020년 1월 이후 같은 기간의 전체 사망자 84.2만 명의 3.0%에 해당된다. 코로나19 확진자 100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명률은 2022년 7월 31일 현재 0.13%로 집계되었다.

[그림 I-8]과 [그림 I-9]를 보면, 코로나19의 확산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사망자가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제1차 확산 시기인 2020년 2월 말부터 4월까지 사망자가 증가하였다. 또한, 제3차 확산 시기인 2020년 12월 중순부터 사망자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1년 1월 사망자가 508명에 도달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2021년 1월에 코로나19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하였다.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이 2021년 7월 이후 사망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2021년 12월에는 코로나19 사망자가 1,967명에 이르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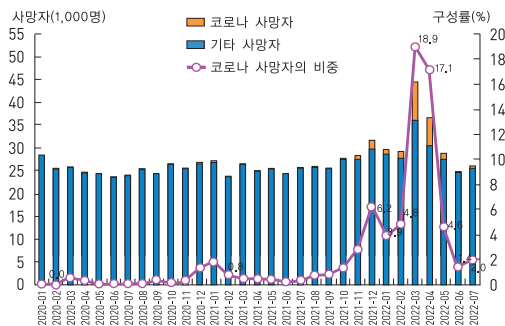
2022년 3월과 4월에 각각 8,420명과 6,285명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I-9]에서 보는 것처럼, 코로나19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3월과 4월에는 각각 18.9%와 17.1%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그림 I-8]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사망자 및 누적사망자 추이, 2020.2~2022.7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그림 I-9] 코로나19로 인한 월별 사망자 및 전체 사망자에 대한 구성률, 2020.1~ 20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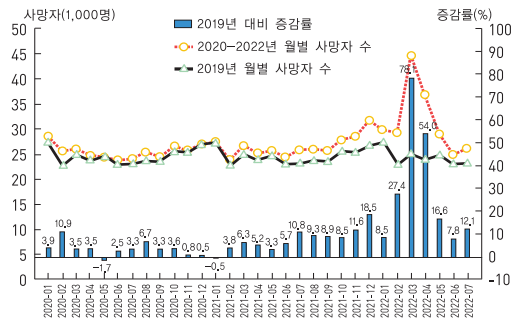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월.

[그림 I-10]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월별 사망자의 추이와 2019년 같은 달 대비 증감률을 보여준다. 대체로 2021년 2월 이후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에 비해 초과 사망자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22년 3월과 4월의 사망자 수는 각각 2019년 3월과 4월보다 무려 78.1%와 54.0% 증가하였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지난 2년 반 동안 사망원인이 다르게 분류되었지만 코로나19의 간접적 영향이나 파급효과로 인한 사망자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사망원인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신고 자료가 가용해지면 초과 사망에 대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림 I-10]코로나19 확산 이후 사망자 수의 월별 추이 및 2019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20.1~2022.7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월.

지역인구의 변화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경제적 발전과 산업화에 수반하여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의 결과, 2020년 도시 인구의 비중이 81.2%에 도달하였다. 읍 지역 인구를 제외하면 농촌 인구의 비중은 9.0%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시 인구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젊은 연령층의 지속적인 이탈로 절대 인구의 감소와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 도시화의 특징은 도시 인구의 성장이 모든 도시에서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I-4>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도시화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서울 인구는 1990년 1,061만 명을 기록한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2010년보다 21만 명이 감소한 959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서울의 면적은 605km²로 전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서울 인구의 비중은 2020년 18.5%에 달한다. 또한, 서울 인구에 인천과 경기도 인구를 포함하는 수도권 인구는 2020년 현재 전국 인구의 50.2%에 해당하는 2,604만 명에 이른다.

<표 I-4> 서울, 수도권 및 도시 인구, 1960~2020

(1,000명)

연도	서울	서울 대도시권	수도권	시(동) 부	군(읍·면) 부	전국
1960	2,445	2,938	5,194	6,997	17,992	24,989
1970	5,433	6,327	8,730	12,710	18,173	30,882
1980	8,364	10,744	13,298	21,434	16,002	37,436
1990	10,613	16,508	18,586	32,309	11,102	43,411
2000	9,895	19,441	21,354	36,755	9,381	46,136
2010	9,794	21,875	23,836	39,823	8,758	48,580
2020	9,586	23,744	26,043	42,065	9,764	51,829

주: 1) 인구는 외국인 인구를 포함함.

2) 서울대도시권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내 시(동)부 인구를 포함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인구를 포함함.

4) 1960~2010년은 현장조사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자료이며,

2020년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전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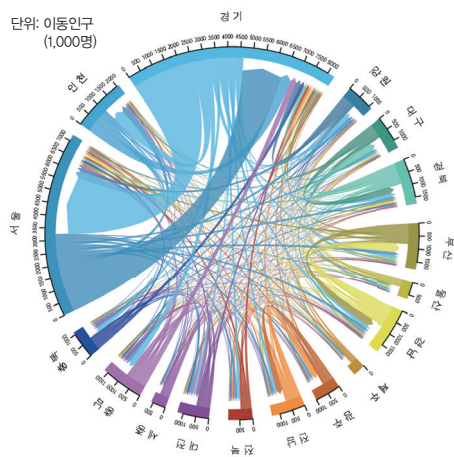
<표 I-4>를 보면, 서울과 서울대도시권, 수도권 인구의 증가 추세를 연대별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1960년대에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는 부산과 대구의 인구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서울과 이 두 도시 위주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의 인구성장은 1970년대에 들어와 둔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서울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지가 서울 근교로 확산되고 서울로 유입되었던 인구가 성남, 부천, 안양 등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로 확산되면서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70~1980년 기간에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4%와 4.3%에 달하였다. 포화 상태에 이른 서울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은 그 후에도 지속되며 1990~2020년 기간에 103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서울 이탈 현상은 취학 자녀가 없는 30대 부부가 주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 산업단지의 조성 and 거주지의 교외화로 인한 인구의 확산으로 대도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1995년 이후 부산과 2000년 이후 대구에서도 관찰된다.

[그림 I-11]은 2015~2021년 기간 각 시·도 간 전입과 전출 이동의 규모와 방향을 보여준다. 이 기간에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가 빠져나간 인구보다 26.8만 명이 많았다.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의 출발지는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부산의 순으로 많았고, 전출인구의 목적지는 충청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의 순이었다.

[그림 I-11] 시·도 간 전출 및 전입 인구, 2015-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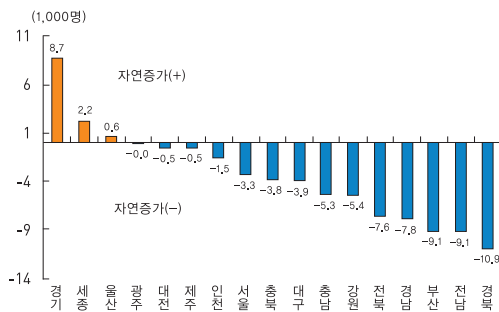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한 지역의 인구는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 의한 자연증가와 전입과 전출의 차이에 의한 순이동인구에 의해서 변화한다. [그림 I-12]에서 보는 것처럼, 2021년에는 경기도, 세종과 울산은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의 자연감소가 이루어졌다. 자연감소의 폭은 경상북도,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의 순으로 컸다. 또한 권역별로는 2017년 호남권과 영남권의 지역인구가 자연감소를 시작해 2020년에는 중부권으로 확대되었으며, 2030년대에 이르면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권역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는 1960~2020년 기간에 4배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서울대도시권의 인구는 무려 8.1배가 되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의 인구도 같은 기간에 4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60년 700만 명에 불과하던 시(동)부 인구는 2020년 4,207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도시 인구의 이러한 팽창은 기본적으로 농촌으로부터의 대규모 인구이동에 기인한다. 군(읍·면)부 인구는 같은 기간 1,799만 명에서 976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정부는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이 각종 도시문제와 병리현상의 근원이라는 인식하에 1964년부터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지방에 성장거점도시와 혁신도시를 육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은 지속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림 I-12] 시·도별 자연증가, 2021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또한, 최근 일부 시·군·구 지역에서 초저출산과 더불어 인구의 과다 유출로 인한 지역인구 감소가 지역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선, 자동차 등 기간산업의 불황으로 제조업 취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통영, 군산과 같은 지역들은 앞으로 일자리가 회복되거나 출산수준이 획기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지역사회가 ‘소멸’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높은 집 값 때문에 수도권의 인근 신도시로 이주하는 젊은층이 늘어나고 있는 포천, 동두천과 부산의 일부 지역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울산, 대구, 부산 등 영남지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5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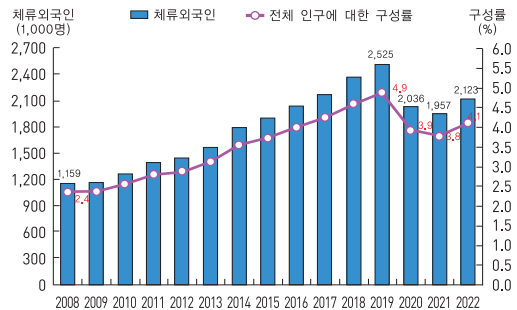
다인종 이민사회

전통적으로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던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초부터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 증가로 다인종 이민사회로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 국제결혼의 안정성 그리고 사회통합이 사회정책적 관심의 중요한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9년 252.5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한국 인구의 4.9%에 해당된다. 체류외국인은 2013~2019년 기간

에 연평균 8.2%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림 I-13]에서 보는 것처럼,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각 203.6만 명과 195.7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체류외국인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단기체류 관광객 증가,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대상 확대,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신청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I-13] 체류외국인의 규모와 전체 인구에 대한 구성률, 2008~2022



주: 1) 체류외국인 규모는 매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수이며, 2022년은 8월 말 기준임.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체류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2022년 8월 현재, 중국이 39.7%로 가장 많고, 베트남(10.7%), 태국(8.7%), 미국(7.5%), 우즈베키스탄(3.5%), 러시아(2.5%)의 순이다. 체류자격과 목적은 재외동포(F-4)가 가장 많았고, 비전문취업(E-9), 사증면제(B-1), 영주(F-5), 유학(D-2), 결혼이민(F-6), 단기방문(C-3) 등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는 한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을 지칭하며, 외국인 거주자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1990~2021년 기간에 외국인 배우자와 이루어진 결혼의 누적 규모는 66만 건에 달한다. 이 기간에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이 47.1만 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체 국제결혼의 71.4%에 해당된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은 같은 기간 18.9만 건이며, 지난 30여 년 동안 상대적으로 완만한 변화 추세를 보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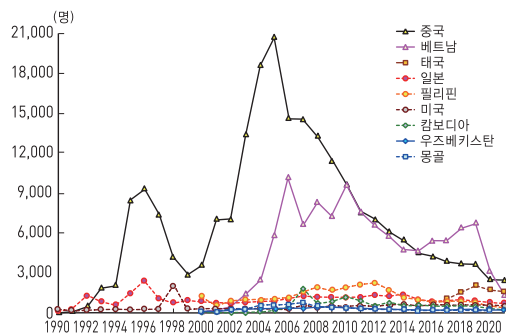
혼인신고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는 외국인과 결혼이 4,710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진입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5년에 4만 2,356건의 최고점을 기록하였고, 그 후 감소 추세로 반전되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각각 1만 5,341건과 1만 3,102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전체 결혼건수에 대한 국제결혼의 비중은 1990년의 1.2%에서 2005년 13.5%로 높아졌으며, 2021년에는 6.8%로 집계되었다.

외국인 여자 배우자는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제결혼의 초기 단계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중국 조선족 출신 여자 배우자의 비중이 점차 낮아졌다. 그리고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여자 배우자의 출신국가가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 여러 국가로 다양해졌다. [그림 I-14-1]을 보면, 외국인 여자 배우자는 2015~2020년 기간에 베트남 출신의 여자 배우자가 가장 많았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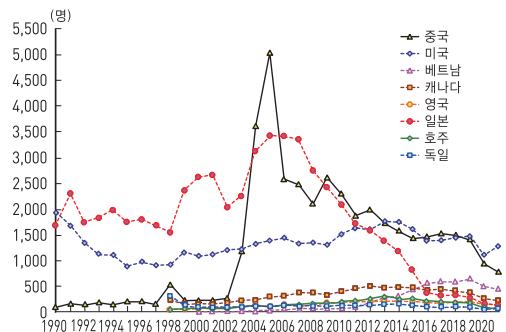
로나19의 확산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여자 배우자의 출신국가는 2021년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중국 다음으로 태국, 베트남, 일본, 미국, 러시아, 필리핀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그림 I-14] 출신국가별 외국인 여자 및 남자 배우자 수, 1990~2021

1) 여자 배우자



2) 남자 배우자



출처: 김두섭, 「한국인의 국제결혼과 외국인 배우자의 적응」, 2015.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은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에 비해 사례수가 현저하게 작다. 외국인 남자 배우자의 출신국가는 중국, 미국, 베트남, 캐나다, 일본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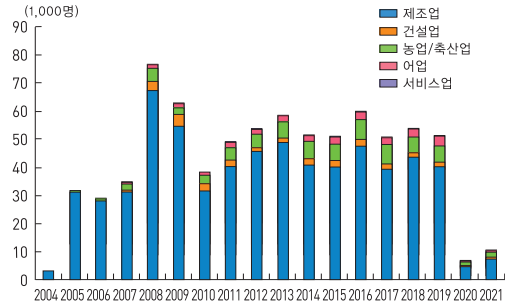


I-14-2]는 중국인 및 일본인 남자와의 결혼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현저하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중국인 남자와의 결혼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2021년 현재 미국, 중국, 베트남, 캐나다, 일본, 영국 등의 순으로 많으며, 이들 여섯 국가가 전체의 72.1%를 점유하고 있다. 베트남 남자와 결혼한 한국 여자는 귀화한 한국인이 대부분이다. 한국 남자와 결혼했던 베트남 여자의 일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하고 베트남 남자와 결혼하는 형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노동하며, 체류외국인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2021년 11월 현재 39.5만 명에 달하며, 남자와 여자가 각각 78.9%와 21.1%를 구성한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에 비해 6.0만 명이 감소한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인력의 입국과 고용을 관리하는 고용허가제를 2004년부터 운영해왔다. [그림 I-15]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의 5개 업종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적용대상 국가는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 등 16개 국가로 제한된다.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며, 이들은 가족 동반이나 초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림 I-15]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업종별 추이, 2004-2021



출처: Doo-Sub Kim, 『Foreign Residents in Korea 2021: A Statistical Handbook in Graphs and Tables』, 2022.

지속적인 출산력 저하로 인하여 인구가 자연 감소하며, 저임금 직종의 노동력이 부족하고 농촌지역의 젊은 남성들이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유입은 당면한 일부 사회문제들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체류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및 그 자녀 세대의 규모가 증가하여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외국인 유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 인구의 민족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국처럼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해온 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문화적 편견과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 인한 복지와 취업 기회의 박탈 등 역차별의 주장이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